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2013. 8. 29.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금융연구원

Korea's Leading Think Tank





# C O N T E N T S

## I .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산층이란?
2. 중산층의 현황
3.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4. 정책적 시사점

## II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 1. 중산층이란?

- 중산층 개념은 시대적, 학문적,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정의
  - 과거에는 주로 사회계층적으로 중간계급에 속하는 집단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 현대적 의미의 중산층은 소득, 교육수준, 직업, 사회·문화생활 및 주관적 의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발전
- ➡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지니며,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음.
- 중산층은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정치·문화의 중추적 역할(Middle Class Consensus)
  - 중산층이 탄탄한 사회는 정치·사회적 안정, 소비기반 확대, 미래 투자증대로 성장에 기여  
 “중산층적 가치는 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자산의 원천” (Doepke and Zilibotti)
  - 반면 중산층이 약화될 경우 정치불안 및 계층갈등 확산, 소비·투자·저축의 위축, 포퓰리즘적 정책확대로 미래투자재원의 낭비 등으로 국민행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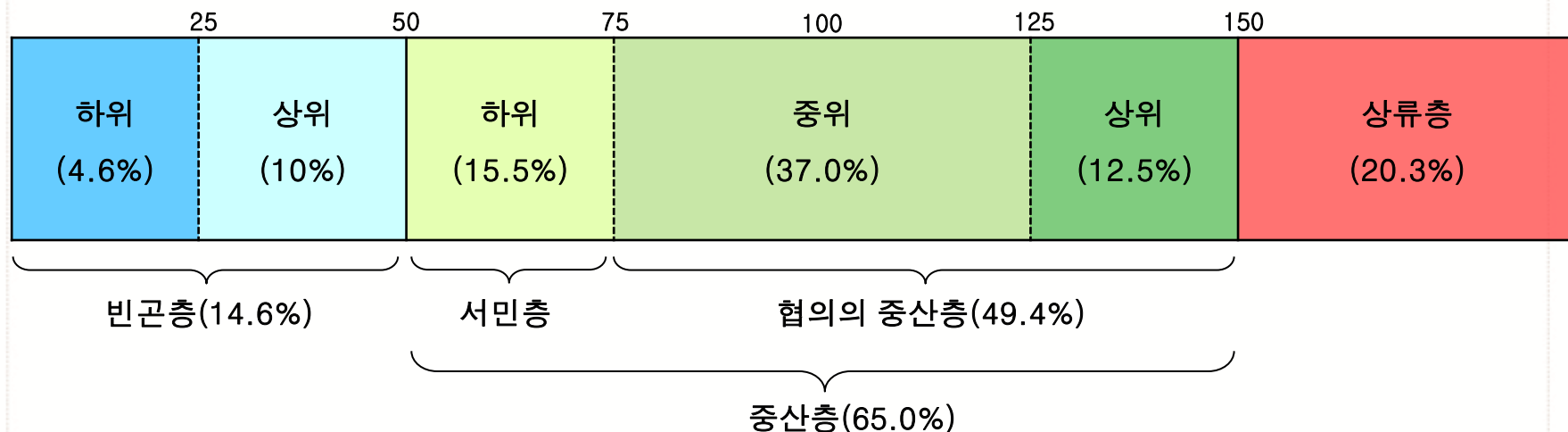
## 2-1. 중산층의 현황 : 중산층 가구의 규모

■ 중산층(middle income class) 규모에 대한 정확한 경제적 기준은 없으며, 다양한 정의가 가능

- 통상적 기준(중위 가처분 소득의 50~150%)에 의한 중산층 규모는 '12년 현재 65% 수준

※ '12년 중위 가처분소득(시장소득): 4,251만원(4,418만원) (4인 가구 균등화 소득 기준)

- 또는 하위 중산층(중위소득의 50~75%)을 서민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별도 구분할 경우, 협의의 중산층 비중은 약 50%



## 2-2. 중산층의 현황 : 중산층 규모의 변화

■ 중산층 규모는 2008년까지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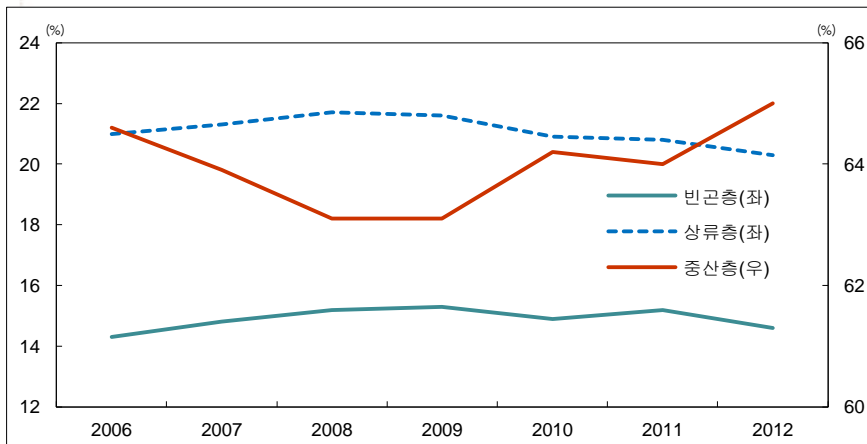
※ 중산층 가구비중(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64.6%('06) → 63.1%('09) → 65.0%('12)

■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의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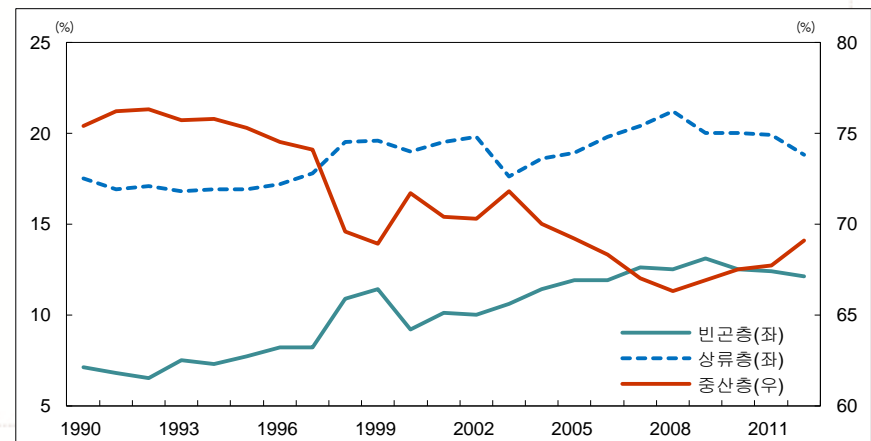
● 이는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에 주로 기인

※ 소득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가처분소득): 0.256('90) → 0.285('12)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1인 이상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인 이상 도시가구, 가처분소득)



## 2-3. 중산층의 현황 : 중산층의 소득점유 비중

■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

- 상·하위 계층간 소득 및 자산의 격차는 늘어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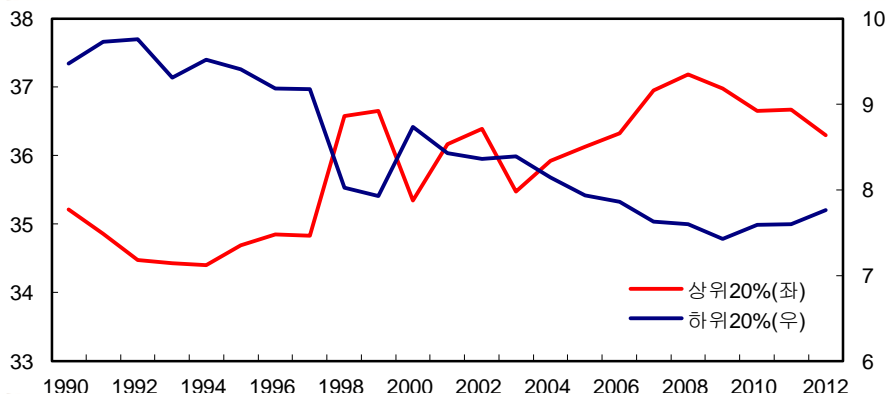
- ※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계층 상승이동이 줄어든다”(OECD)

- 특히, 소득하위 10%의 실질소득은 지난 12년간 거의 정체상태로, 그동안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

- ※ 2000년 이후 실질소득 증가: 상위 10% 1.4배, 중위 50% 1.3배, 하위 10% 1.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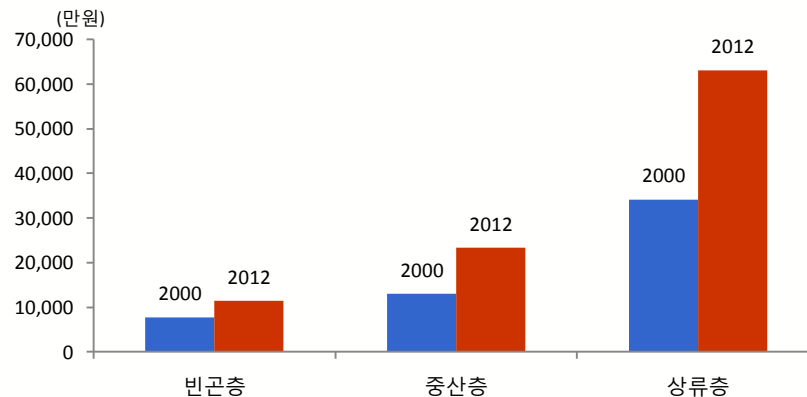
(미국은 실질 중위가구소득이 '99년 이후 8.9% 하락)

소득점유율의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소득계층별 자산 현황(실질평균)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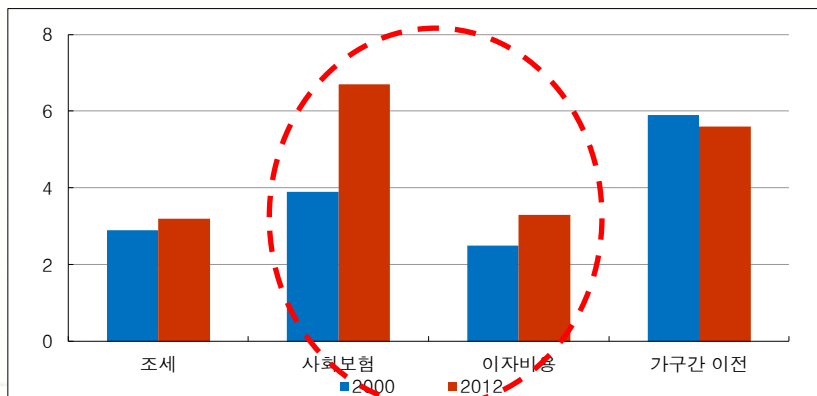
## 2-4. 중산층의 현황 : 중산층의 가계지출

- 2000년 이후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비지출은 1.25배 증가하여 가처분소득 증가(1.35배)에 미달
  - 이는 총 가계지출 중 소비와 무관한 사회보험료부담(2.2배) 및 가계부채 이자부담(1.7배) 등 비소비지출(1.53배)이 빠르게 늘어난 것에 기인
  -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통신비(1.5배), 보건의료비(1.4배) 및 교육비(1.37배)가 가장 빠르게 증가
- 이로 인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만족도는 낮을 수 밖에 없음.
  - 의식조사(매경 '12) 결과,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비율이 15.8%에 불과(일본 28.8%, 중국 48.4%)

### 중산층 가계지출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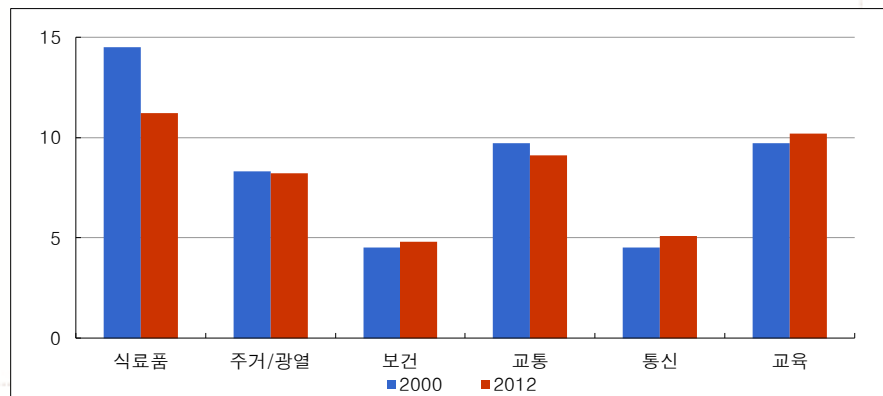
<비소비지출>

(단위: %)



<소비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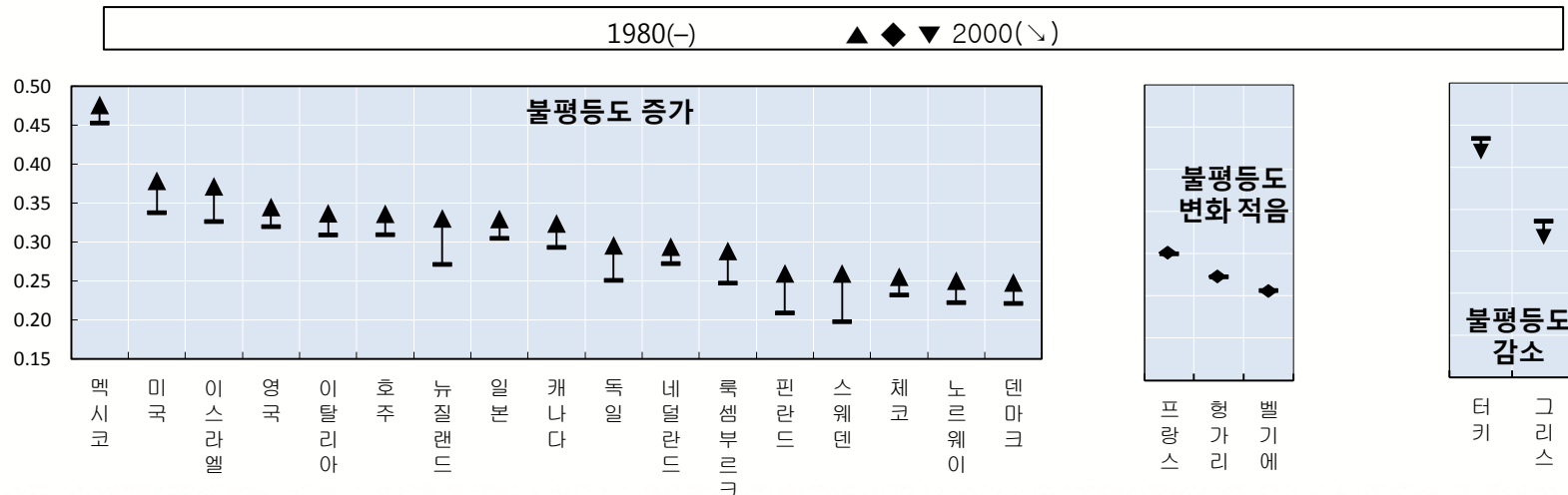


### 3-1.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국제적 추세

소득분배 악화·중산층 약화·빈곤층 증가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OECD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임.

- 분배 악화/중산층 약화의 주요원인:
  - 기술진보에 따른 기능수준별 임금격차의 확대
  -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가구 증가 및 가족 공동체 해체
  -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 등

OECD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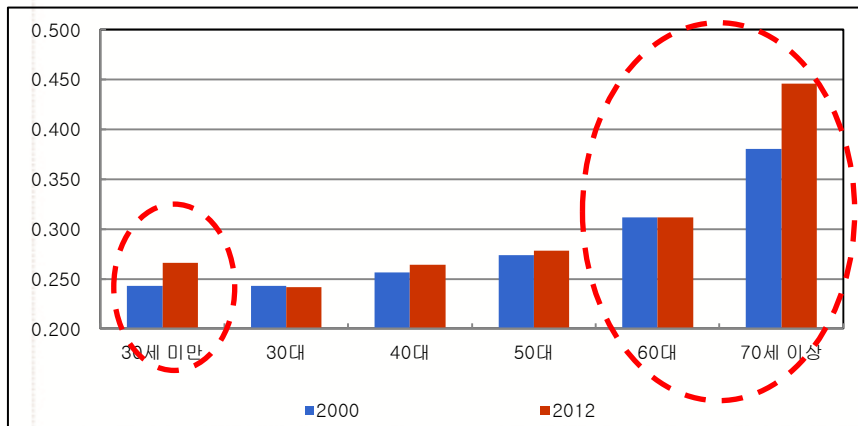


## 3-2.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가구/1인가구는 중산층 감소, 분배악화의 주요 추세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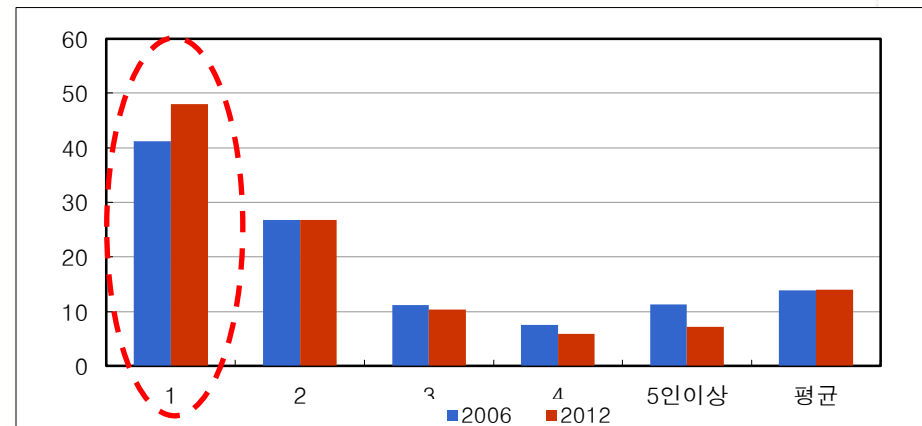
- 노인가구(60세 이상)비중: 15.2%('90) → 19.3%('01) → 25.3%('10)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성숙 등으로 노인가구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높음.  
(국민연금수급자('11): 65세이상 인구의 26.7%, 월평균급여('12): 30만원)
- 1인 가구의 비중: 16.0%('06) → 20.3%('12)
  - '12년 현재 1인 가구의 빈곤률은 48.1%, 2인가구는 26.8%로 전체 빈곤률(14.0%)보다 현저히 높음.

가구주 연령대별 빈곤율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도시가구 2인 이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가구원수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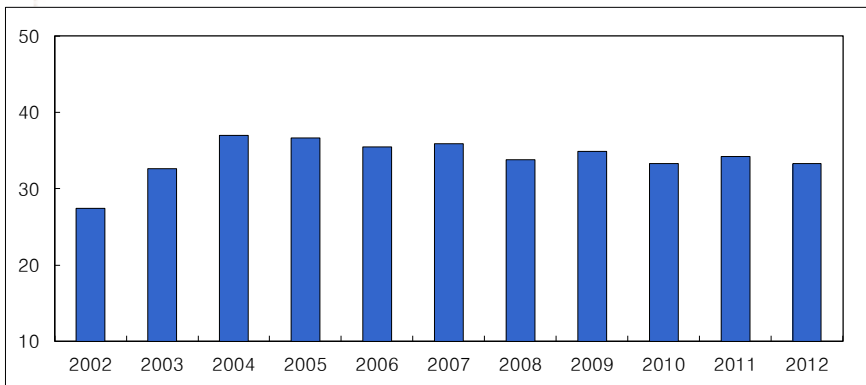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국 1인 이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3-3.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시장소득의 변화(1)

#### ■ 시장근로소득은 중산층 규모 및 소득분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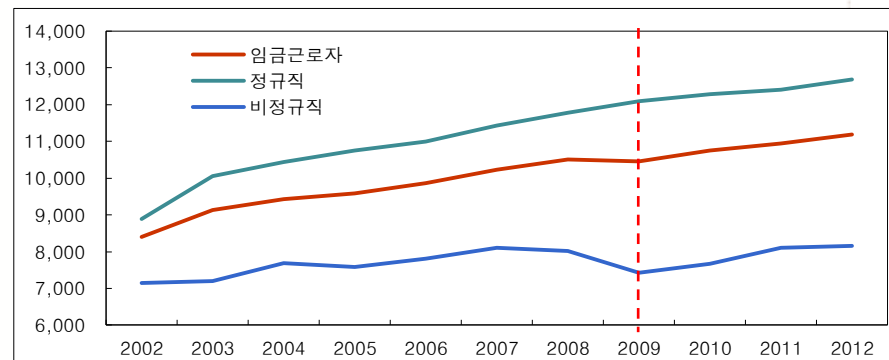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확대가 중산층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모습
  - 비정규직 비중: 27.4%('02) → 37.0%('04) → 33.3%('12)
  - 비정규직 시간당 평균임금(정규직=100): 80.5('02) → 61.5('09) → 64.3('12)

비정규직 비중 추이(임금근로자 기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추이(원)



주: 실질시간당임금(2010=100)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 3-3.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시장소득의 변화(2)

특히 2010년 이후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고용증가와 밀접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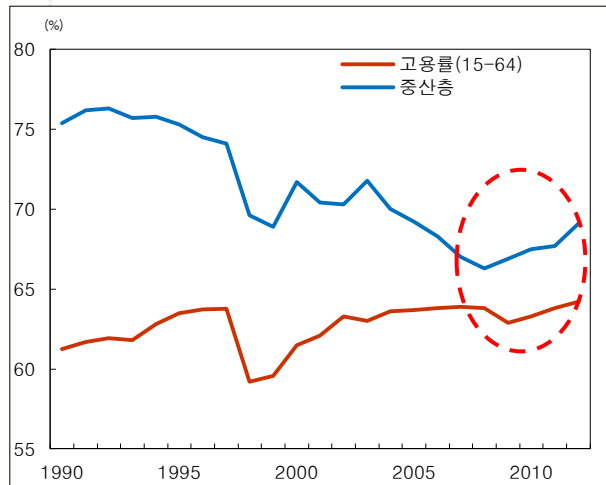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중산층 비중과 고용률(15~64세)은 동반 상승 추세

※ 연간 취업자수 증가 : '10년 323천명 → '11년 415천명 → '12년 437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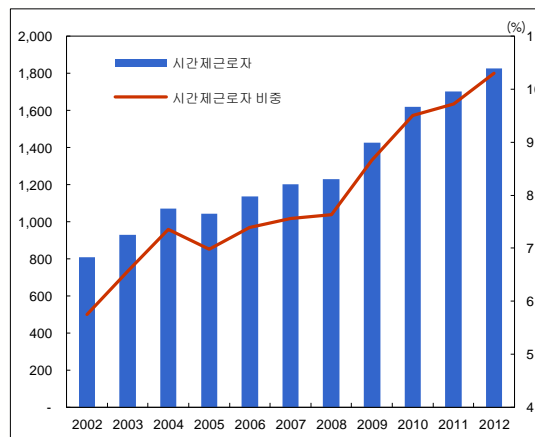
- 이는 시간제 근로증가/근로시간단축과 함께 고령근로자의 고용증가에 의해 주도

— 특히 30세 이상 여성층 및 5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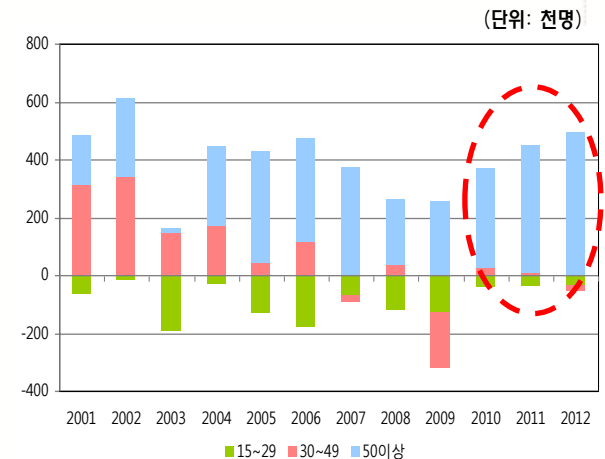
중산층 비중과 고용률(15~64세)



시간제근로자 증가 추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 3-4.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정부의 역할

조세/사회안전망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분배개선과 중산층 약화를 보전해주는 중요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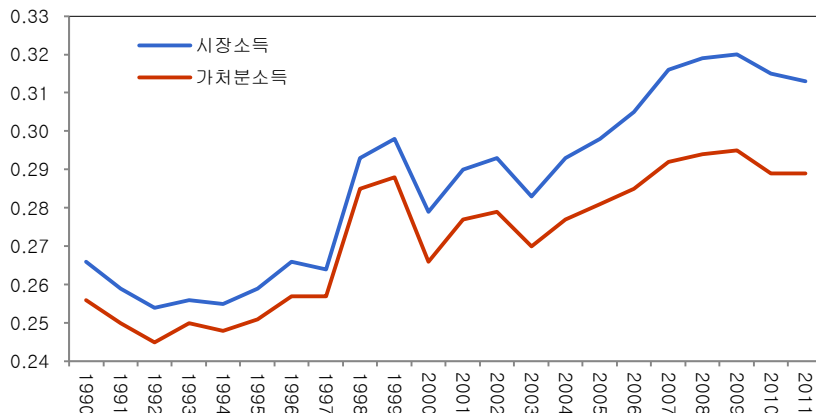
-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차이: 4.7%('00) → 7.6%('07) → 8.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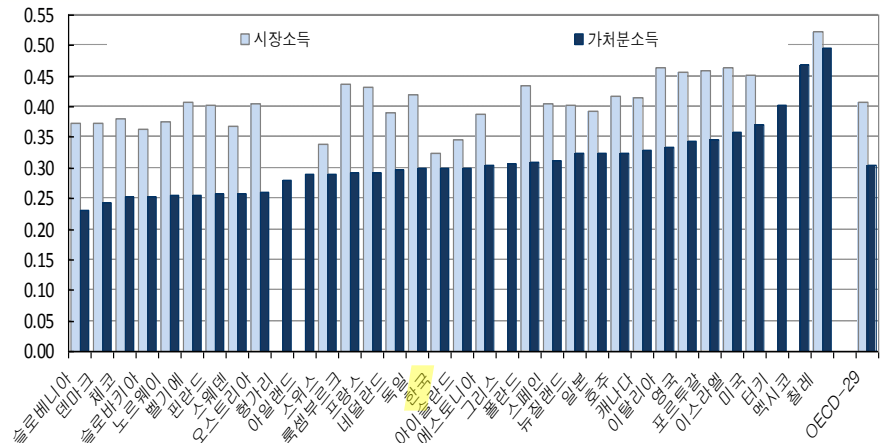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정부역할이 아직 크게 미흡한 상태

-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은 수준임.**

지니계수 주이(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가처분과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국제비교(2000년대 후반)



주: 국제비교를 위하여 생산가능인구(18~65세)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자료: OECD, "Divided We Stand" 2012.

### 3-5.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사회적 격차와 이동성(1) KDI

- 중산층 진입/탈락이 잦은 **빈곤위험가구(하위 중산층/ 상위 빈곤층)**는 소득 상위층에 비해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유
  - 노인가구/1-2인 가구가 많고, 주거가 불안정하며, 보유자산이 미흡
  -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빈곤의 여성화').
- 특히 **가구원의 취업기회 확대는 중산층 진입/빈곤탈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
  - 미취업가구의 빈곤율('12년)은 63.6%, 1인 취업가구는 14.2%인 반면, 2인 이상 취업자 가구의 빈곤율은 3.0% 뿐임(가계동향조사).

소득계층별 가구특성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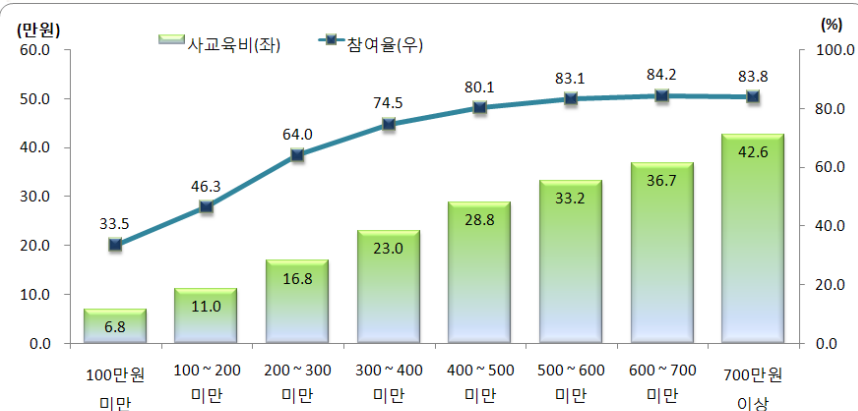
(단위: %,명,천만원)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비중)	가구규모 (1/2인 가구 비중)	주거형태 (월세비중)	가구주의 성 (여성 가구주 비중)	취업자수 (평균근로자수)	가구주 근로형태 (상용직 비중)	총자산
상류층		7.1	29.1	8.7	7.4	1.8	63.0	60.3
중산층	중·상위	11.5	32.4	18.3	13.2	1.6	44.6	28.7
	하위	28.9	50.4	25.0	31.6	1.2	16.1	16.0
빈곤층	상위	54.9	75.0	26.0	42.3	0.6	1.9	12.1
	하위	63.5	83.7	21.8	54.7	0.4	1.1	14.3

## 3-5. 중산층 규모 변화의 배경 : 사회적 격차와 이동성(2)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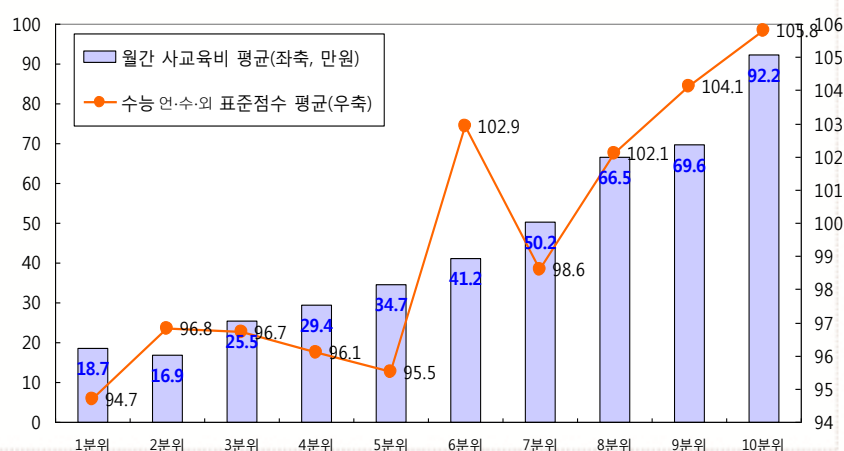
-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나, 사교육 격차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음.
  - '12년 현재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사교육비는 6배 이상 차이
  - 교육 격차는 경제력의 대물림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저해
    - \*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일반가구 대비 고소득가구): 1.27배('85)→ 16.6배('00)[김광익 외]
- 대학진학률은 80%에 육박하나 25-29세 인구 중 NEET의 비중은 26%('10)로 OECD 31개국 중 8위
  - ※ 반면, 실업계(전문계)학생 비중은 24%('09)에 불과(OECD평균: 46%)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2년)



자료: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득분위별 사교육비와 수능 주요 영역 점수



자료: KDI(2012)

-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경제·고용·복지·교육 정책의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됨.
  - 중산층 규모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분배개선·빈곤완화·이동성 제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달성이 가능
    - 여성·노인·청년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향상기회를 확대
    - 인구·가족구조변화 등 중산층 기반약화의 추세적 요인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의 역할 강화
    - 인적투자확대 및 형평성제고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

⇒ 중산층 복원정책은 “고용률 70%+ $\alpha$ ”임.

- 고용률 70% 로드맵의 달성을 근간으로 하여 중산층 탈락방지 및 진입촉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



#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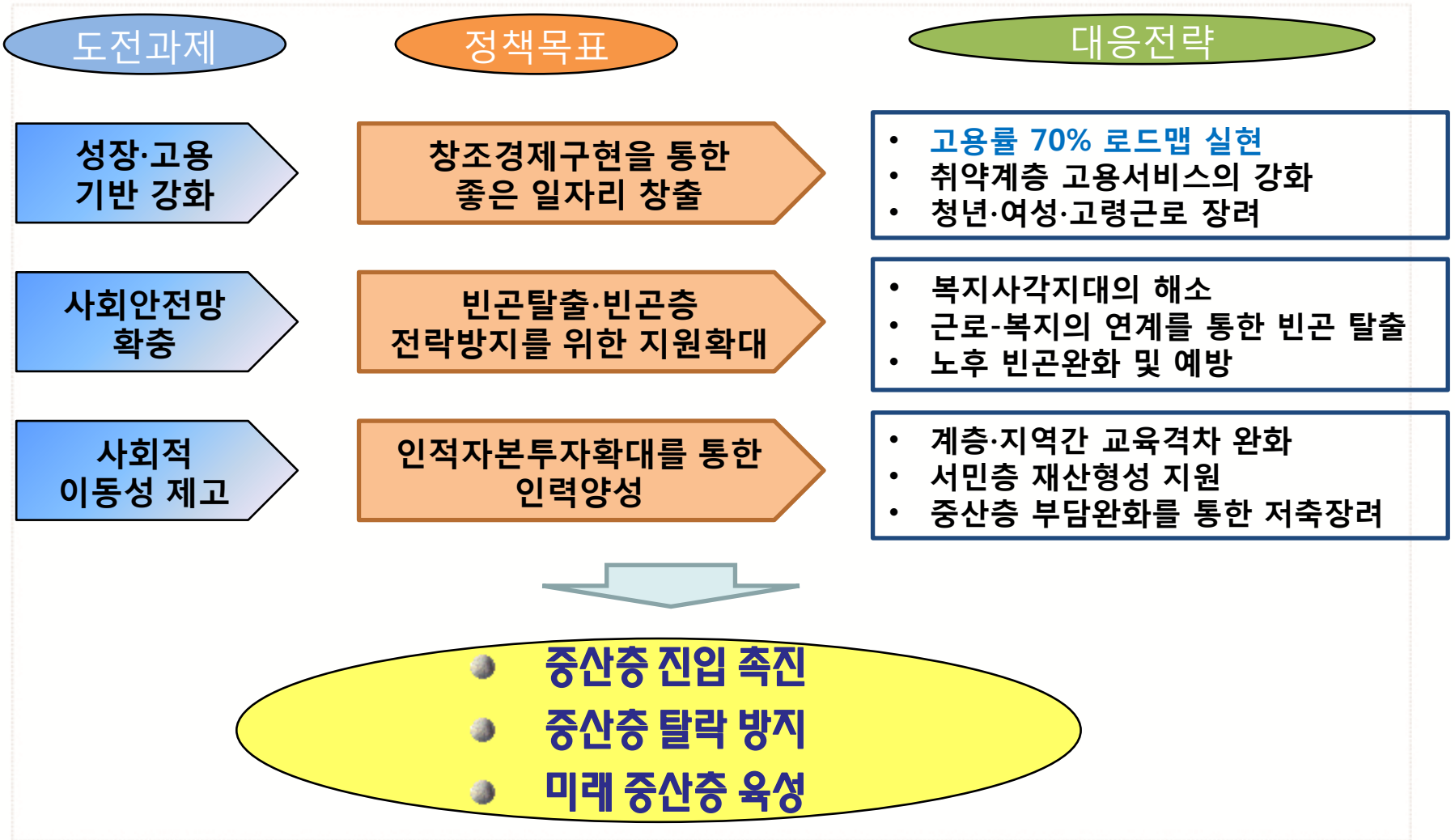
## I .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황과 문제점

## II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취약계층 고용기반의 강화
3. 사회안전망의 확충
4.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



# 1.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 기본방향



## 2-1. 고용기반강화: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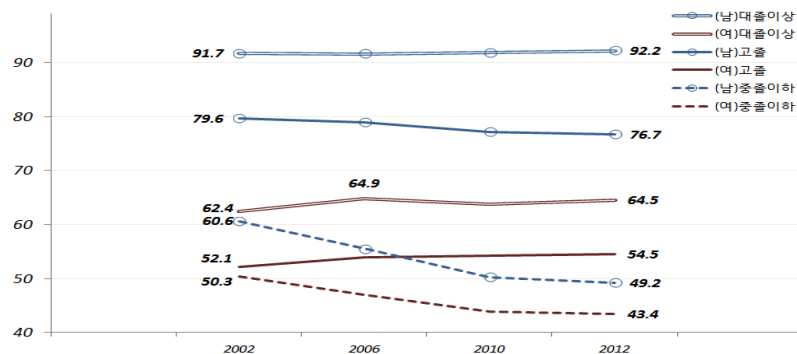
### ❖ 필요성

- '90년대 중반 이후 저학력인구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OECD 최대수준)
- 저소득층 미취업자 중 고용서비스 이용비율은 1%대 수준

### ❖ 정책방향

-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재정비 및 인프라 강화
  - 복잡다기화 되어 있는 정부 일자리사업을 통·폐합 및 재조정
  - ※ '12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2개 기관 194개 사업
  - 대기업·정규근로자 위주의 직업훈련을 중소기업·비정규직·미취업자 등으로 확대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인력확충 등 인프라 강화

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미취업자의 지난 4년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 경험

(단위: %)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율	전체	빈곤 여부		극빈곤 여부	
		계속	1회 이상	계속	1회 이상
전체 미취업자	1.2	1.1	1.1	0	1.3
65세 미만 미취업자	1.7	3.6	2	0	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4~7차 자료

## 2-2. 고용기반강화: 시간제근로와 IT 결합의 고용서비스

### ❖ 필요성

- 자녀·부모부양 주부, 중고령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은 가변성이 높아 기존 고용지원 인프라 이용이 곤란
- 단기간·소수 인력을 원하는 구인기업과 탄력적 일자리 희망자를 신속하게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필요

### ❖ 정책방향

- 탄력적 일자리의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매칭해주는 **보다 공신력있는 On-line 매칭제도**를 마련
  -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기술개발·재정지원을 하고, 점진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
  - ※ 영국의 ‘**자투리시간 거래소(Slivers of Time)**’를 벤치마킹할 필요

#### <영국의 ‘자투리시간거래소(Slivers of Time)’사례>

정부 지원하에 사회적 기업이 지역단위로 운영하는 On-line 매칭시스템으로, 구직자-구인기업 간에 근로가능시간, 업무, 보수 등의 실시간 양방향 입력·매칭이 가능하고 사후 근로자/사용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 1995년 도입 이후 계속 확산 중에 있으며, 현재 London 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6만 5천명이 사이트 방문

## 2-3. 고용기반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정비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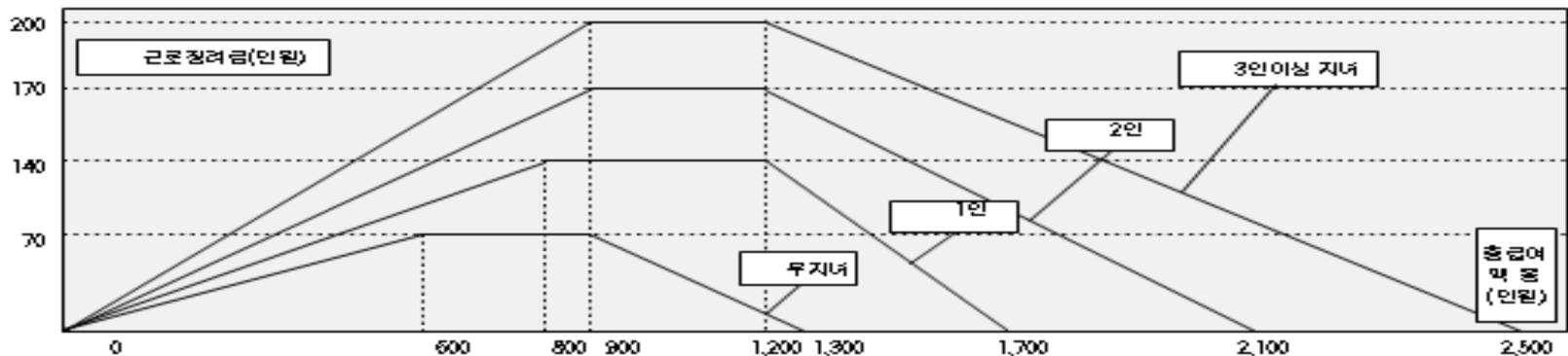
### ❖ 필요성

- EITC는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이나, 적용범위의 협소로 중산층 육성효과가 미흡
  - 적용대상: 4인 가족 기준 연 2,100만원, 1인 가구 제외 등
- 급여가 자녀수에만 연동되어 **맞벌이 가구 및 부모부양가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 ❖ 정책방향

- EITC 자격조건(소득기준)을 맞벌이에 불리하지 않게 조정(**일정 가산액 추가**)
- 적용대상에 빈곤위험이 높은 **1인 가구도 포함**
- 부모부양가구의 경우 **차등지원기준을 [자녀수+부모수]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지원대상선정의 정확성 제고와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등

2013년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2-4. 고용기반강화 : 여성·노인층 지원

### ❖ 필요성

- 급속한 보육시설 확대과정에서 부실기관들이 방치되어 질관리가 매우 취약
  - ※ ‘자녀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 영·유아층 미취업 이유의 22%('12 보육실태조사)
- 노인일자리사업('13년 23만개)의 수요충족률은 약 17%에 불과(보사연)

### ❖ 정책방향

-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교사, 급·간식, 비용 등 상세내용에 대한 정보공시의 의무화
  - 서비스 질의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부실기관 퇴출을 유도
  -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충지원
  - 육아휴직 활성화 및 아빠 육아휴직(daddy's quota)의 장려 등
- 중고령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지연을 위한 정년연장·고용연장의 조기정착
  -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확대
    -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연계 등)

## 2-5. 고용기반강화: 청년취업제고를 위한 '선취업·후진학제도'의 확대

### ❖ 필요성

- 지나친 '고교졸업직후 대학진학'의 관행은 과도한 입시경쟁 및 청년취업지연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
  - 또한 학업부진 학생의 재도전 기회의 부재로 낙오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

### ❖ 정책방향

- 현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한해 시행중인 「선취업·후진학제도」를 일반계 고교생에게도 확대 적용
  -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 및 청년취업지연을 개선하고,
  - 보다 많은 학생에게 경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제공
  - 동 제도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인력난 완화를 도모

#### <선취업·후진학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후 산업체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재직경력과 학업의지를 평가(수능점수 불필요)하여 선발하는 제도로써, 정부(학비지원/대출)·대학(맞춤형 교육과정)·기업(교육여건지원)의 협조하에 운영(2010년 도입)

### 3-1.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 ❖ 필요성

-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리상 누락이 빈번
  -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입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 최저임금 이상 근로 소득자 중 건강보험의 직장 보험료 미납부자가 400만명 규모(KDI)

#### ❖ 정책방향

- 중산층을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예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
  - 국세청 등 관계부처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소득파악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 특수형태근로자를 비롯한 비정형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촉진 방안 마련
  - 국민연금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확대 및 실업 크레딧 제도의 도입 검토 등
  - ※ 크레딧제도: 출산 및 군복무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직장가입기준)

(%)

	2008년			2012년 8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직	77.3	78.0	65.8	80.3	82.2	78.9
비정규직	39.0	41.5	39.2	39.0	45.4	43.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항목)

## 3-2. 사회안전망 확충 :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의 개선

### ❖ 필요성

- 정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중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근로자 보험료의 최대 절반까지 매칭지원
- '12년말 현재 약 40만개 사업장 대상 8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음.
  -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기존 가입자들인 반면 신규가입자는 28%에 불과

### ❖ 정책방향

-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방식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 신규가입자에 대해 한시적(6개월 내지 1년)으로 보험료 매칭지원 수준을 현재보다 높게 책정(보험료 전액지원 등)하여 가입유인을 제고
  - 일정기간(예:5년) 경과 후에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이와 함께, 신고를 기피하는 고용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
  - 사업장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3-3. 사회안전망 확충 : 노후빈곤 완화 및 예방

#### ❖ 필요성

- 평균수명연장 및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노후빈곤위험이 증대
- 국민연금인하('07)로 중산층 홀별이 가구의 노후생계유지에 한계[예시]

#### ❖ 정책방향

-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노후빈곤을 완화
- 주택연금(역모기지)의 다양화 및 지원강화를 통한 제도확산 유도
  - 물가연동연금 제공 및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 등 검토
- 전업주부를 포함한 '1인 1연금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

[예시] 월 근로소득 200만원의 홀별이 가구

	보험료	부담액
가구주	근로자 부담액(소득의 4.5%)	월 9만원
배우자	신고 소득(200만원)의 9%	월 18만원
계	근로자 소득의 13.5%	월 27만원

※ 이들 부부가 20년간 가입할 경우의 연금액: 가구주 40만원+배우자 40만원(총 80만원)

## 4-1. 이동성 제고(교육격차의 완화) :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확대

### ❖ 필요성

-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등은 교육격차완화 및 비행청소년화 방지 등에 매우 큰 효과
-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주로 오후 돌봄(방과후-17시) 위주로 운영, 맞벌이 지원에 한계
  - ※ “아동기의 빈곤은 낮은 학업성취도 및 열악한 사회 경제적 지위로 연결”(Cochran)

### ❖ 정책방향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및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방과후 프로그램을 방학기간 중까지 연장 실시(영어 원어민 교사 등)
    - ※ 방학 중에 취약계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경향
-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 및 지원 강화
  - 맞벌이 가구를 위해 저녁돌봄(17:00-22:00)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돌봄지원센터를 증설

## 4-2. 이동성 제고(교육격차의 완화) : 미래형 학교 운영

### ❖ 필요성

- 교육격차완화의 핵심은 정규 교육의 질제고(공교육 정상화)에 있음.
  - 사교육 기회가 없는 빈곤층 우수학생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

### ❖ 정책방향

-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미래형학교를 시범적으로 설립·운영
    - 빈곤취약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운영
    - 첨단화된 융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
    -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운영
- ※ 미국 빈민가 자녀대상의 첨단형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를 벤치마크

#### <미국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사례>

- 미국 Microsoft사가 필라델피아 교육부의 협조 하에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2006년 흑인 밀집 빈민 지역에 설립한 최첨단형 고등학교임.
- 지식융합형 학습(학습활동, 건축디자인, 경영관리, 지역참여 등)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함.

## 4-3. 이동성제고(재산형성) : 개인발달계좌(IDA)의 확대

### ❖ 필요성

- 많은 선진국들이 서민저축장려를 위한 매칭방식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저축습관 향상을 도모  
※ 예: 미국(IDA), 캐나다(Learn Save), 호주(Saver Plus) 등
- 우리나라에도 희망키움통장(복지부) 등 매칭방식 개인발달계좌가 있으나 지원대상의 협소성 및 재원상의 한계 등으로 빈곤탈출지원에 한계(2013년 신규 대상자 목표: 1만 4천가구)

### ❖ 정책방향

- 개인발달계좌(IDA)의 지원대상 확대
  -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가구(현행)에서 차상위빈곤층까지 확대
  - 현행 근로소득조건(최저생계비의 60~100%)도 완화할 필요
- 매칭지원금 수급자격의 완화
  - 매칭지원조건을 기초보장 탈수급(현행)에서 '저축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전환하여 저축동기를 강화

#### <사례: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지원대상: 저소득층 대상(빈곤선 200% 이하 근로빈곤층)
- 저축용도: 주택구입, 대학학자금, 소규모 창업 등
- 매칭방식: 주로 1:1 또는 2:1이 가장 일반적인 매칭율(저축용도·목표액과 연계)
- 교육상담: 참여자는 저축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 참여(위반시 강제 탈퇴)

## 4-4. 이동성 제고(재산형성) : 서민층 저축기회의 확대

### ❖ 정책과제

#### ■ 서민층 대상의 세금우대 저축의 재정비로 저축유인을 제고

-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가입대상확대 및 의무가입기간 완화(예: 7년 → 5년) 등
  - 현재의 납입한도(연 1,200만원)를 서민층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 필요
- 고소득층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편
  -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서민층으로 제한 등

#### ■ 이와 함께, 중산층 가계부담완화는 저축여력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

- (의료비) 저소득 가구의 간병비 지원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 등
  - ‘10년 저소득가구(1~3분위) 중 의료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가구가 9.8%
- (사교육비) 공교육 정상화 및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으로 사교육수요 완화
- (주거비)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층 임대주택제공 확대방안 마련 등



감사합니다.